

배포 일시	2023. 1. 13.(금)		
담당부서	국토교통부	책임자	과 장 장순재 (044-201-3662)
	지역정책과	담당자	서기관 박원호 (044-201-3665)
공동배포	행정안전부	책임자	과 장 이형석 (044-205-3501)
	균형발전제도과	담당자	사무관 조총래 (044-205-3522)
	문화체육관광부	책임자	과 장 강민아 (044-203-3131)
	체육진흥과	담당자	사무관 이문옥 (044-203-3138)
	보건복지부	책임자	과 장 이윤신 (044-202-3465)
	노인정책과	담당자	사무관 조성원 (044-202-3456)
	중소벤처기업부	책임자	과 장 이동원 (044-204-7440)
	인력정책과	담당자	사무관 송인철 (044-204-7445)
보도일시	2023년 1월 17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16.(월) 12:00 이후 보도 가능		

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5개 중앙부처 손을 맞잡다

- '지역활력타운' 구성에 지방소멸대응기금·다양한 국고보조사업 연계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와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와 문화체육관광부(장관 박보균), 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,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이영)는 1월 17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'지역활력타운'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.
 -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·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·문화·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,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*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.
 - * 「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」(21.10.19.)에 따라 지정된 89개 시·군·구
 - 지역사회가 직면한 지방소멸, 초고령화 등 인구 리스크에 대응하고 국정 목표인 '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'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다.
- 인구감소와 일자리 축소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,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각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.

- 그간 지역개발 사업은 부처별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연계가 어렵고, 사업별 규모도 작아 성과와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.
 -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,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가 협업하여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.
- 지역활력타운은 수도권 은퇴자·청년층 등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수요를 위해 주거·문화·복지가 결합된 수요맞춤형 주거거점을 다부처 협업으로 제공해 지속적인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.
-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귀촌인구 확대 등으로 지방이주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, 양질의 주택 마련이 어렵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 등으로 인해 지방 이주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.
 -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, 지역활력타운은 다양한 유형(단독주택·타운하우스 등)과 공급방식(분양·임대)의 주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문화·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.
 - 특히,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각 부처는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며,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선정될 경우 각 부처의 연계사업을 통합 지원받는다.



< 지역활력타운 개념(예시)>

-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부처협력을 총괄하고, 문체부·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연계사업을 발굴,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.
 -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역활력타운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,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센터 등 여가·문화 인프라를 확충한다.
 - 보건복지부는 돌봄, 보건·의료 등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, 국토교통부는 주택·인프라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인허가,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추진한다.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다.
-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대상 시·군·구를 선정,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.
 - 이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역투자발전협약을 체결하여 지원 내용과 방식을 확정하고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.
- 문성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및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 실장 등 부처 관계자들은 “지역활력타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, 앞으로도 정부는 일자리·관광 등 연계·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